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중헌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7
----------	---

발의연월일 : 2024. 5. 30.

발 의 자 : 백중헌 · 이현승 · 김성원
김석기 · 김태호 · 박덕흠
박충권 · 이인선 · 정희용
박정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변경이나 해제가 어렵고 그 일대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며 해당 지자체의 개발 사업도 차질을 빚게 되어 불만이 큰 상황임.

이에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중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주민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을 변경하도록 하고, 개발 사업에 지장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등)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2항) 중 “지정하거나 변경하면”을 “지정 또는 변경하거나 제4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중전의 제6항) 중 “제4항까지의 규정에”를 “제9항까지에”로, “지정 절차”를 “지정·변경 절차”로, “기준에”를 “기준 등에”로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중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의 상수원보호구역이 제2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변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환경부장관에게 그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주민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변경을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변경 요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관련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수도사업자 또는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 상수원보호구역의 변경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관련 주민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9조의 제목 “(주민지원사업)”을 “(주민지원사업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7조제3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변경 요청을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개발사업 실시에 지장이 크다고 판단하면 국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거나 필요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

제83조제1호 중 “제7조제3항”을 “제7조제7항”으로, “제4항에”를 “제8항에”로 한다.

제87조제4항제1호 중 “제7조제4항”을 “제7조제8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제7조(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u><신 설></u>	<u>② 환경부장관은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중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을 변경할 수 있다.</u>
<u><신 설></u>	<u>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의 상수원보호구역이 제2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변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환경부장관에게 그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주민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변경을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u>
<u><신 설></u>	<u>④ 제3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변경 요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관련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수도사업자 또는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 상수원</u>

<신 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③ ~ ⑤ (생략)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절차, 허가의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주민지원사업) ①·② (생략)

<신 설>

보호구역의 변경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관련 주민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⑥ -----지정 또는 변경하거나 제4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⑦ ~ ⑨ (현행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⑩ -----제9항까지에-----지정·변경절차-----기준 등에-----.

제9조(주민지원사업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7조제3항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 변경 요청을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개발사업

<p>③ (생 략)</p> <p>제8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제7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한 자</p> <p>1의2. ~ 11. (생 략)</p> <p>제87조(과태료) ① ~ ③ (생 략)</p> <p>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제7조제4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p> <p>2. ~ 9. (생 략)</p> <p>⑤ (생 략)</p>	<p><u>실시에 지장이 크다고 판단하면 국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거나 필요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u></p> <p>④ (현행 제3항과 같음)</p> <p>제83조(벌칙) ----- ----- ----- -----.</p> <p>1. 제7조제7항-----제8항에----- ----- -----</p> <p>1의2. ~ 11. (현행과 같음)</p> <p>제87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 -----.</p> <p>1. 제7조제8항----- -----</p> <p>2. ~ 9. (현행과 같음)</p> <p>⑤ (현행과 같음)</p>
---	--